

시민과 2050 탄소중립 실현 선도한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치유농장 확대

전주시, 탄소저감 실천포인트제 연구용역·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 추진

전주시가 2050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하는 시민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탄소중립 시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탄소중립 시민강사를 양성해 찾아가는 교육도 펼친다는 방침이다.

시는 2050 탄소중립도시 실현 및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올해 탄소중립 시민 공감대 확산 및 탄소저감 참여 분위기 조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먼저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 주체인 시민들의 자발적인 실천을 유도하고, 생활 속에서 탄소저감 활동을 실천하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부

터 오는 10월까지 '탄소저감 실천포인트제(가칭)'를 운영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탄소저감 실천포인트제는 탄소포인트 등 기존 인센티브 제도가 특정 분야에 국한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과 달리 환경부 온실가스 감축 7대 분야인 △에너지전환 △수송 △건물 △폐기물 △흡수원 △소비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 활동으로 적립된 마일리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일상생활 속 탄소저감 측정 및 계량화가 가능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 탄소저감 활동 검증 및 인센티브 지급 방안 등에 대한 객관성 및 공감대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부나 지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주민의 실천과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교육도 추진한다. 탄소중립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과 탄소저감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난해 탄소중립 시민강사 23명을 양성한 시는 올해는 시민강사 역량 강화 및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심화이론, 현장교육, 교수학습법 등 심화과정 교육을 이수시간을 충족해 탄소중립 시민강사로 위촉된 강사들

은 다음 달부터 2달간 탄소중립 시민강사의 시연을 통해 강의 경험을 쌓고 6월부터는 동 자생단체와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을 직접 찾아가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하게 된다.

시는 생애주기별 탄소중립 동영상 교육자료를 제작해 시각적 효과를 증진시키고, 어린이 탄소중립 아동극을 활용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 대상 맞춤형 특색 교육으로 미래세대 아이들의 인식 전환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민선식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탄소저감 활동 참여를 위하여 쉽게 다가가는 탄소중립 교육을 추진하고, 실천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시민들은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민들과 함께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장동에 이어 대성공영주차장 인근에도 발달장애인 치유농장이 생긴다.

시는 완산구 대성공영주차장 인근에 발달장애인의 야외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치유농장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덕진구 장동의 유유 국유지를 활용해 조성한 치유농장이 코로나19로 외부활동이 제한돼 가정과 시설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돌봄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 장애인 치유농장을 확대기로 했다. 3월 말 개장을 목표로 완산구 대성공영주차장 인근 유유 사유지에 치유농장이 조성되고 있다.

시는 이 농장이 조성되면 장동 농장과 함께 두 곳의 농장에서 발달장애인과 함께 두 곳의 농장에서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치유농업교육 및 체험,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식재료를 이용한 요리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영농활동 체험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치유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전주푸드와 연계해 직매장에 납품하거나 직거래장터 부스를 운영하는 등 발달장애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발달장애인에게 지속가능한 농업의 가치와 생산적 활동의 가치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발달장애인의 사회성 향상과 일자리 참여 기회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북지역본부 등 5개 기관은 지난해 조성된 장동 치유농장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신체적·정신적 치유를 돕기 위해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며, 2021년 행정안전부가 선정한 '국민 손으로 뽑은 7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 행정안전부가 주최하고 한국생산성분부(KPC)가 주관한 '제11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 우수사례(사람중심 포용사회 분야)로도 선정돼 뛰어난 부지를 활용해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치유농장을 조성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호평을 받기도 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지역관광 현안 해결 성장 이끌 관광기획 사업자 모집

전주시가 역량을 갖춘 관광기획 사업자를 찾는다.

시는 관광 트렌드 변화에 대한 대응력 강화 및 지역관광 현안 해결을 위해 오는 18일까지 '2022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 참여자를 공개 모집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사업은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 연계망을 활용해 지역의 관광 현안을 해결하고, 주민 주도 관광콘텐츠를 발굴해 지역의 관광수요 창출을 목표로 한다.

시는 발굴된 지역관광추진조직과 △관광사업 기획 및 계획 △관광홍보 마케팅 △관광품질 관리 △ESG 관광경영 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만들 계획이다.

응모자격은 전주에서 지역 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네트워크와 역량을 갖추고 있는 전주시 소재 법인이다. 단, 중복 또는 유사 사업으로 국가 지원을 받고 있거나 국제 및 지방세를 체납 중인 법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역관광추진조직으로 선정되면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국비 1억 3500만 원과 시비 1억 원을 포함해 총 2억 3500만 원의 보조금을 받게 된다.

공모신청서는 오는 18일까지 직접 전주시 관광거점도시추진단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세계여성의날 알려며 캠페인 하는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 전북여성단체연합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전주시 풍남문광장에서 114주년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1차 전북 여성대회를 열고 거리 캠페인을 하고 있다.

전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접수

2021년 4분기 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전주시는 지난해 4분기에 영업시간 제한 등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접수와 함께 10일부터 현대해상(완산구 노송광장로 29) 5층에서 현장접수를 병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은 지난해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인원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해,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원 금액은 개별업체 손실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지급을 원칙으로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방역조치 이행일수 X 보정률(90%)'로 계산해 지급된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손실 보상 보정률이 기존 80%에서 90%로 상향됐으며, 하한액도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지난 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본인인증 절차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만으로 신청받고 있다.

시는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10일부터는 현대해상 5층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별도로 마련해 현장접수를 한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10일부터 23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하며, 대표자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필요서류를 갖춰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10일부터 온라인으로, 15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0일부터 14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5일부터 28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손실보상 민원전담센터(063-237-2114) 또는 전주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담창구(063-281-6501~4)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로 재산권 보호해요"

미등기 부동산을 소유했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달라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은 오는 8월 이전에 신고하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전주시는 오는 8월 4일로 예정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 특조법) 종료일 이전까지 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 특조법은 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소유자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부동산 특조법 대상은 1988년 1월 1

일 이후 전주시로 편입된 12개 법정동(석구동, 원당동, 중인동, 용복동, 상림동, 산정동, 금상동, 중동,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농지 및 임야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 해당되며, 소유권 귀속에 관해 현재 소송 중인 부동산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동산 특조법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동산소재지 동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포함)의 보증을 받은 보증서를 첨부해

완산·덕진구청 민원봉사실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이후 해당 구청 민원봉사실에서는 이해관계인 통지와 현장 조사,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는 경우 확인서를 교부하게 되며, 신청인은 교부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부동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전주시 30필지의 확인서 발급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이 중 8필지는 확인서를 발급 받아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함으로써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됐다. 또, 7필지는 진행 중이며, 15필지는 기각됐다. /김윤상 기자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전주매일 금연캠페인